


경제관계장관회의
24-25-3
(공개)

 역동경제로
서민·중산층 시대 구현!

20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 성과

2024. 12. 5.

관 계 부 처 합 동

순서

I. 「'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 방안」 개요 .. 1

II. 과제 추진현황 및 성과 2

III. 향후 추진계획 5

◆ 참고. 이행현황 총괄표 6

I. 「'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 방안」 개요

◆ [’24.6.17. 경제관계장관회의] 다수 부처가 연관된 **킬러규제**와 현장에 숨어 있는 낡은 관행 등 **현장규제**를 망라하는 **전방위적 규제 발굴·혁파** 추진

※ 4개 중점 분야, 총 102개(17개 킬러규제 + 85개 현장규제) 과제

목표

‘현장규제’를 넘어 ‘공공조달 킬러 규제’를 혁파

【 4대 분야 102개 추진 과제 (17개 킬러규제 + 85개 현장규제) 】

★既완료 ●12월 완료 예정

① 징벌적 행정제재 운영방식 개선
→ 10개 과제
(킬러5, 현장5)

- ① 획일적·징벌적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선진화 ●
- ② 과징금 적용 확대로 기업 재기(再起) 지원 ●
- ③ 쇼핑몰 판매중자·거래정지 개선으로 안정적 영업보장 ★
- ④ ‘자정기간 중지’ 신설로 불합리한 기업 피해 예방 ★
- ⑤ 경미한 규격미달 제품 할인 납품기회 확대 ★

② 중소 조달기업 비용부담 경감
→ 21개 과제
(킬러4, 현장17)

- ① 행정 편의적 인지세 부과 개선으로 과세 부담 경감 ★
- ② 공공조달 신인도 정비로 인증 부담 완화 ★
- ③ 신속한 시장가격 변동 반영으로 적정 물품대가 보장 ★
- ④ 보증서 발급 과정 전체 온라인화로 오발급 비용 제거 ●

③ 기업발목 잡는 행정부담 완화
→ 54개 과제
(킬러4, 현장50)

- ① MAS 중간점검 개선으로 서류 작성 부담 경감 ★
- ② 조달물품 규격체계 간소화로 납품 유연성 제고 ★
- ③ 직접생산 점검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 개편 ★
- ④ 우수제품 지정 보장을 위한 유예기간 연장·계약절차 간소 ★

④ 신산업 성장 막는 낡은 규제 혁파
→ 17개 과제
(킬러4, 현장13)

- ① 청년·창업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·성장 지원 ●
- ② 패스트트랙 도입으로 혁신제품 진입요건 완화·기간 단축 ★
- ③ 혁신제품 계약방식 다양화로 첨단기술 성장지원 ●
- ④ 첨단융복합 제품의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 요건 완화 ★

II. 과제 추진현황 및 성과

- ◆ 총 102개 규제 혁신 과제를 실질적으로 연내 모두 완료 예정
⇒ '24.12.4. 기준 91건 완료, 나머지 과제(11건)도 12월 완료
- ◆ 연간 980억 수준 조달기업 비용 경감, 시장 진입확대·판로지원 등 경제적 효과 발생

1 징벌적 행정제재 운영방식 개선

- 1 **킬러규제** 획일적·징벌적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선진화 : 「국가계약법령」 입법예고(9.30)
【조치사항】 국가계약법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('12월 예정)

현황 사안의 경중 고려 없는 획일적·징벌적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과도한 법적 분쟁, 영업활동 위축 등 부정적 효과 발생

개선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제재처분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면책 및 감경 규정을 정비하고, 제재기준을 세분·명료화

- ① (면책대상) 천재지변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면책
- ② (감경범위) ^{현행} 1/2까지 감경 → **개선** 잔여기간에 대해 1/2 감경 추가 허용

【효과】 불필요한 소송 및 제재 감소로 연간 420억원 수준 기업매출 확대

- 2 **킬러규제** 과징금 적용 확대로 기업 재기(再起) 지원 : 「국가계약법령」 입법예고(9.30)
【조치사항】 과징금 부과기준(조달청 내부지침) 개정(7.5),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('12월 예정)

현황 경미한 위반 시 '제재처분에 갈음하는 금전적 부담'인 과징금 활용 저조

개선 기업 재기 기회 부여를 위해 기준 개선 등 과징금 체계 합리화

- ① (부과기준 개선) ^{현행} 연평균 계약금액 → **개선** 연평균 납품금액
- ② (절차 간소화) 과징금 부과 절차 ^{현행} 4단계 → **개선** 3단계(7일 감소)

【효과】 과징금 전환을 통한 안정적 영업권으로 연간 155억원 수준 기업매출 확대

- 3 **킬러규제** 나라장터 쇼핑몰 판매중지·거래정지 개선으로 안정적 영업 보장 : 제도 시행(8.29)
【조치사항】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(조달청 훈령) 개정

현황 귀책이 없음에도 쇼핑몰에서 1개사가 된 경우 등 획일적 판매중지 조치

개선 판매중지·거래중지 근거 중 **官** 우월적 조치 정비로 피해 최소화

- ① (판매중지 정비) 무귀책 1인 사업자, 조사 대상 업체에 대한 판매중지 최소화
- ② (경과실 구체) ^{현행} 경미한 사항도 획일적 거래정지 → **개선** 정비기회 부여

【효과】 판매중지 등 최소화로 연간 120억원 수준 기업 판매증진 유발

2 중소 조달기업의 비용부담 경감

1 **킬러규제** 행정 편의적 인지세 부과 개선으로 **과세 부담 경감** : 제도 시행(7.15)
【조치사항】 조달청 인지세 비부과 대상 지침 마련 ★ '제3차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Best 5' 선정

현 황 도급(일정 과정 완성을 약정)계약에 인지세 부과를 규정한 「인지세법」 등에 따라 모든 조달계약에 인지세 일괄부과

개 선 계약별 특성에 맞는 부과기준 마련으로 인지세 대상을 절반으로 축소

【효과】 연간 16,000건 인지세 부과 축소로 **연간 30.5억원** 수준 부담 경감

2 **현장규제** 불필요한 **계약비용 경감** : 제도시행(7.21)
【조치사항】 계약규격 변경 및 수정공고

현 황 개인용컴퓨터 계약시 과도한 인증요구(법정+임의)로 기업부담 발생

개 선 법적 인증 외 계약시 임의인증(불필요한 시험항목 등) 폐지 등

【효과】 불필요한 인증 획득 및 유지 비용 등 **연간 100.5억원** 수준 부담 경감

【참고 : 개인용컴퓨터 MAS 인증 현황】

구분	종류	데스크톱 컴퓨터	일체형 컴퓨터	모니터	노트북/태블릿	비용
인 증	법 적	①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	○	○	○	130만원/모델
		② 전기안전인증	○	○	○	170만원/모델
		③ 대기전력저감	○	○	○	50만원/모델
	임 의	④ 소음	-	-	○	100만원/모델
		⑤ 신뢰성	-	○	○	50만원/모델
		⑥ Q or K	○	○	○	900만원/년

3 기업 발목을 잡는 행정부담 완화

1 **킬러규제** MAS 중간점검 개선으로 **서류 작성 부담 경감** : 제도 시행(8.29)
【조치사항】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(조달청 훈령) 개정

현 황 다수공급자계약(MAS) 업체에게 매년 중간점검*을 의무화

* 인증, 면허, 시험성적서 등 각종 자격 관련 자료와 전자세금계산서 자료 등

개 선 중간점검(계약기간 3년 기준) 횟수를 **현행 2회** → **개선 1회**로 축소

【효과】 중간점검 서류 준비 등 경감으로 **연간 8,000여개 기업, 48억원** 수준 부담 감소

2 **현장규제** **상용 군수품 쇼핑몰 등록으로 장병 선택권 강화 : 제도 시행(5.23)**
【조치사항】 면도기 등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, 운동화 국방규격 폐지 등

현 황 **획일적** 국방규격에 따른 **총액계약(1품목·1업체 선정)** 운영(장병 선택권 제한)

개 선 **현행** 획일적 국방규격, 총액계약 → **개선** **신세대 장병 선호**를 반영하여
 다양하고 **고품질 시중 상품**(운동화, 면도기, 식품류 등)을 **MAS 계약**

【효과】 장병 선택권 확대, 만족도 증가 → 궁극적으로 국방력 강화에 기여



4 신산업 성장을 막는 낡은 규제 혁파

1 **킬러규제** **청년·창업 기업의 조달 시장 진입·성장 지원 : 「국가계약법령」 입법예고(9.30)**
【조치사항】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(12월 예정) /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관리 규정(조달청 고시) 개정

현 황 초기 청년창업 기업 등의 성장지원을 위해 벤처나라 운영 중이나,
 낮은 **수익계약 한도**(2천만원)로 인해 **실효성** 있는 지원에 한계

개 선 1인 견적 수익계약* 한도 **현행** 2천만원 → **개선** **5천만원으로 상향**

* 경쟁입찰 없이 수요기관이 1인 계약상대방을 바로 선택 가능

【효과】 청년창업 기업에 대한 시장 진입·성장 지원으로 **연간 573억** 수준 판로 확대

2 **킬러규제** **‘패스트트랙’ 도입으로 혁신제품 진입요건 완화·계약대기 단축 : 제도 시행(7.1)**
【조치사항】 혁신제품 구매운영 규정(조달청 고시) 개정

현 황 신속한 해결책 발굴이 필수인 **수요자제안형 혁신제품 지정 요건·절차** 등이 **복잡·과다**하고, 지정 이후 **시범구매**까지 **장기간**이 소요

* 국민·수요기관 등 수요자 의견을 반영하여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**혁신제품** 발굴

개 선 수요자제안형 혁신제품 ①**진입요건** 완화 및 ②**시범구매** 기간 단축

【효과】 혁신제품 시장 진입 확대로 **연간 124억원** 수준 판로 확대

3 **킬러규제** 혁신제품 계약방식 다양화로 **첨단기술 성장지원** : 「국가계약법령」 입법예고(9.30)
【조치사항】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('12월 예정)

현 황 국가계약법령 등에서 혁신제품 수의계약 방식을 '구매'로 제한

개 선 혁신제품 수의계약 요건을 '임차' 등을 포함한 구매가 가능토록 확대

【효과】 혁신제품 계약 방식 다양화로 **연간 35억원** 수준 혁신제품 판로 확대

4 **킬러규제** 첨단융복합 제품의 **나라장터 쇼핑몰 등록 요건 완화** : 제도 시행(8.29)
【조치사항】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(조달청 훈령) 개정

현 황 MAS 등록 시 **현행** 업계 공통규격이 있는 경우만 허용

개 선 업계 공통의 상용규격이 없더라도 제품간 공통성·대체성이 있는 로봇 등 신산업 제품은 개별업체 제시 규격을 기반으로 MAS 계약

【효과】 MAS계약 추진으로 **신산업 기술개발 제품의 시장 진입 확대**

III. 향후 추진계획

1 규제개혁 성과는 **조달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안내·교육**

- 기업이 규제개선 효과를 즉시 체감하고 안내·교육·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정보 서비스 제공(공공조달 길잡이* + 전담 홈페이지)

* 지방청(24명)과 본청 주요 제도별 담당자(10명)를 전담관으로 지정·운영 중

- 전국 11개 지방청을 활용하여 찾아가는 설명회·간담회 개최

2 규제혁신 과제의 **지속적 사후관리 및 추가적 규제 발굴**

- 현장간담회, 공모전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조달현장의 규제 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·혁파('24.9.22~10.23 규제개선 공모전 102건 건의)
- 발굴된 규제는 리스트업 → 검토 → 한시적 유예, 시범도입 등 전향적 대안 마련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

* 건의 사항에 대하여 수용 여부, 불수용 시 사유 등을 포함하여 상세 피드백 제공

과제명		부처명	이행 현황
① 징벌적 행정제재 운영방식 개선(10개 과제)		킬러규제	현장규제
1	획일적·징벌적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선진화	조달청 구매총괄과 기재부 계약정책과	● (국가 계약법령)
2	과징금 적용 확대로 기업 재기(再起) 지원	조달청 구매총괄과 기재부 계약정책과	● (국가 계약법령)
3	나라장터 쇼핑물 판매 중지·거래정지 개선으로 안정적 영업 보장	3-1. 無귀책 쇼핑물 단일 공급자에 대한 판매중지 조치 개선	★
		3-2. 경과실 구제	★
4	'지정기간 중지' 신설로 불합리한 기업 피해 예방	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	★
5	경미한 규격미달 제품 할인 납품기회 확대	조달청 납품검사와	★
6	건설엔지니어링 용역 낙찰자 지정 전 참여기술인 교체 허용	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	★
7	우수제품 기술분쟁 발생 시 지정보류 제도 개선	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	★
8	품질점검결과 조치예고 의견제출 기한 완화	조달청 품질점검과	★
9	물품·용역 특성에 맞추어 불합리한 제재기준의 명료·세분화 추진	조달청 구매총괄과 기재부 계약정책과	★
10	분할계약 운영으로 과도한 기업 피해 방지	조달청 구매총괄과	★
② 중소 조달기업의 비용부담 완화(21개 과제)		킬러규제	현장규제
1	행정 편의적 인지세 부과 개선으로 과세 부담 경감	조달청 구매총괄과 기재부 부가가치세제과	★
2	공공조달 신인도 정비로 인증 부담 완화	조달청 구매총괄과 기재부 계약정책과	★
3	신속한 시장가격 변동 반영으로 적정 물품 대가 보장	조달청 구매총괄과	★
4	보증서 발급 과정 전체 온라인화로 오발급 비용 경감	조달청 시스템개발팀	● (차세대 나라장터)
5	비축 원자재 외상 판매 적용 이자율 및 보증율 인하	조달청 전략비축물자과	★
6	나라장터 지문입찰 의무 폐지	조달청 전자조달기획과	★
7	선금지급 한도 확대에 따른 시스템 구현 및 사후관리 방안 마련	조달청 구매총괄과	★

8	신속집행을 위한 MAS 계약연장 사전안내 강화	조달청 구매총괄과	★
9	자체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전환 기관 대상 시스템 이용수수료 면제	조달청 전자조달기획과	★
10	기술형입찰 공사 입찰자료 사전공개	조달청 시설총괄과	★
11	데스크탑 컴퓨터 설치비용 현실화로 적정가격 보장	조달청 전기전자구매과	★
12	계약서상에 임금 상당금액을 구분표기 및 시스템 개선	조달청 시설총괄과	★
13	시설공사 맞춤형 서비스 관급자재 대상 MAS 2단계 경쟁 예외 허용	조달청 구매총괄과	★
14	효율적 선금관리를 위한 기업·담당자 안내기능 강화	조달청 구매총괄과	★
15	조달품질신문고 사후관리 시스템 편의성 제고	조달청 조사분석과	● (차세대 나라장터)
16	나라장터 등록·입찰 인증수단 확대 및 비용절감	조달청 전자조달기획과	● (차세대 나라장터)
17	조달 통계 접근성·활용성 증대	조달청 전자조달기획과	● (차세대 나라장터)
18	조달기업 및 시장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대국민 정보 제공	조달청 전자조달기획과	★
19	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대체 제출대상 확대	조달청 전략비축물자과	★
20	RFID 물품관리시스템 공공기관 사용자등록 간소화	조달청 물품관리과	● (차세대 나라장터)
21	부처간 협업을 통한 하도급대금 직불 확대	조달청 전자조달기획과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과	● (차세대 나라장터)

③ 기업 발목을 잡는 행정부담 완화(54개 과제)

킬러규제

현장규제

1	MAS 중간점검 개선으로 서류 작성 부담 경감		조달청 구매총괄과 기재부 공공조달정책과	★
2	조달물품 규격체계 간소화로 납품 유연성 제고	2-1. 우수제품 범위형 규격제 도입	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	★
		2-2. 혁신제품 규격추가 절차 간소화	조달청 신성장조달총괄과	★
		2-3. 상용SW 규격추가 절차 신설	조달청 기술서비스총괄과	★
3	제조등록·직접생산 점검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 개편		조달청 조달등록팀 조달청 조사분석과	★
4	우수제품 지정 보장을 위한 유예기간 연장·계약절차 간소화		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	★
5	제조등록 전담 인력 운용으로 신속한 시장진입 지원		조달청 조사분석과	★
6	사전 품질관리 지원을 통한 조달물자 품질 향상		조달청 조사분석과	★

7	제품 특성을 고려한 원산지 복수 등록	조달청 구매총괄과	★
8	MAS 원산지위반 중점물품 자재 수불부 제출 폐지	조달청 구매총괄과	★
9	일반공사 사전심사 생략으로 공사 조기집행	조달청 시설총괄과	★
10	국고보조사업 시설공사 설계적정성 검토 개선	조달청 설계예산검토과	★
11	기술형 입찰 설계심의 제출서류 간소화	조달청 시설사업기획과	★
12	낙찰자 결정 전 일부 구성원 결격 시 재심사 방법 개선	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	★
13	설계분야 참여기술인 유사용역 실적평가 개선	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	★
14	공공주택 계약 수주 쿼터제 폐지	조달청 공공주택계약팀	★
15	입찰서 평가결과 이의신청 처리절차 개선	조달청 해외물자과	★
16	공동수급 협정서 접수방식 개선	조달청 해외물자과	★
17	품목등록 보완 후 재요청 신속 처리로 시장진입 지원	조달청 물품관리과	★
18	현장대리인 배치기준 완화	조달청 공공주택계약팀	★
19	야외운동기구 외 21종 MAS 진입 시 제출서류 완화	조달청 보건의료구매과	★
20	공공선박 계약 가이드라인·추가특수조건 제정을 통한 불공정 계약 방지	조달청 첨단융합제품구매과	★
21	현장설치도 MAS 제품, 지나친 면허요건 완화	조달청 구매총괄과	★
22	군수품 원자재 검사체계 개선으로 기업부담 경감	조달청 국방물자품질과	★
23	디지털서비스 물품등록 절차개선으로 계약기간 단축	기술서비스 총괄과	★
24	참여기술인 직무경력 평가기준 개선	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	★
25	우수제품 지정신청 시 NET·NEP에 특허공보 제출 삭제	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	★
26	우수제품 협업체의 참여기업 수 확대	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	★
27	공공주택계약 심의과정 접근성 강화를 통한 공정성 확대	조달청 공공주택계약팀 조달청 시설사업기획과	★
28	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신청 제출서류 간소화	조달청 품질총괄과	★
29	참여요건 확대로 화초류 임대 서비스 성장지원	조달청 서비스계약과	★
30	무상 관리전환 절차 간소화	조달청 물품관리과	★

31	군수품 규격 완화 및 장병 선택권 강화	조달청 국방물자구매과	★
32	기술형 입찰 독소조항을 제거하기 위한 표준입찰 안내서 제공	조달청 시설사업기획과	★
33	행정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(노트북) 불필요한 표준규격 폐지	조달청 전기전자구매과	★
34	물품목록번호 자동발급 서비스 확대하여 진입부담 완화	조달청 물품관리과	★
35	조사 전 자진신고 기간 운영으로 중복조사 부담 경감	조달청 공정조달총괄과	★
36	LED 조명장치 규격추가 절차 간소화	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	★
37	일괄 등 기술형 입찰의 수의계약 업무처리지침 적용 대상 확대	조달청 시설총괄과	★
38	건설사업관리용역의 물가변동 검토서식 표준화	조달청 공사원가기준과	★
39	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(평가) 심사서류 제출 온라인화	조달청 시설총괄과	★
40	품질점검결과 규격미달에 대한 재점검 기간 완화	조달청 품질점검과	★
41	사회적 약자기업의 다수공급자계약 진입장벽 완화	조달청 구매총괄과 기재부 공공조달정책과	★
42	조달청 표준일위대가 확대를 통한 공사원가산정 자동화 기반 마련	조달청 공사원가기준과	★
43	안전관리물자 지정방법 개선으로 업체부담 경감	조달청 품질총괄과	★
44	품질보증조달물품 신청자격 요건 폐지	조달청 품질총괄과	★
45	획일적 CCTV 구성품 직접생산 관련 규격관리 개선	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	★
46	종합심사낙찰제 단가심사를 위한 기준단가 공개	조달청 토목환경과	★
47	종합심사낙찰제 시공계획서 작성 부담 경감	조달청 토목환경과	★
48	군수품 원·부자재 검사 범위 재설정으로 업체 부담 경감	조달청 국방물자품질과	★
49	수요 맞춤형 공급을 위한 합성수지제창 세부규격 삭제	조달청 건설환경구매과	★
50	화재안전 예방을 위한 벽천장용 흡음재 구매방법 개선	조달청 건설환경구매과	★
51	다수공급자계약(MAS) 진행 상황 실시간 알림서비스 제공	조달청 구매총괄과	★
52	외자계약요청서 접수 효율성 제고	조달청 해외물자과	● (차세대 나라장터)
53	에어컨 세척서비스 입찰참가 자격 완화	조달청 서비스 계약과	★
54	소방차량 연중 상시 판매 지원을 위한 계약절차 개선	조달청 건설환경구매과	★

4 신산업 성장을 막는 낡은 규제 혁파(17개 과제)

킬러규제

현장규제

1	청년·창업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·성장 지원	조달청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 기재부 계약정책과	● (국가 계약법령)
2	'패스트트랙 도입'으로 혁신제품 진입요건 완화·계약대기 단축	조달청 신성장조달총괄과	★
3	혁신제품 계약방식 다양화로 첨단기술 성장지원	조달청 신성장판로지원과 기재부 계약정책과	● (국가 계약법령)
4	첨단융복합 제품의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 요건 완화	조달청 구매총괄과 기재부 공공조달정책과	★
5	혁신제품 시범구매 참여요건 합리화로 수출기업 지원	조달청 신성장판로지원과	★
6	혁신제품 단가계약 요건 완화	조달청 신성장판로지원과	★
7	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 대상을 지자체 R&D 사업까지 확대	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	★
8	중소 SW개발업체 성장지원을 위한 상용SW 다수공급자계약 전환	조달청 기술서비스총괄과	★
9	공공기관에서 공공성을 인정한 제품의 혁신제품 진입 완화	조달청 신성장조달총괄과 기재부 공공조달정책과	★
10	기술 혁신성 우수기업 대상 혁신제품 평가 완화	조달청 신성장조달총괄과 기재부 공공조달정책과	★
11	공공성 평가 既 통과업체에 대한 차기 공공성 평가 면제	조달청 신성장조달총괄과	★
12	기술력 있는 벤처기업의 공공시장 진입 활성화	조달청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	★
13	혁신제품 시범구매 범부처 정책연계 강화	조달청 신성장판로지원과	★
14	혁신제품 시범구매 평가 피드백 강화	조달청 신성장판로지원과	★
15	기술용역 대상 협상에 대한 계약 기준 마련	건설기술계약과	★
16	혁신제품 시범구매 대상 한시적 확대	조달청 신성장판로지원과	★
17	스카우터 민간위원풀 확대	조달청 신성장조달총괄과	★